

## 한국 국방조달시장 전망과 미국업체의 역할



李相浩 국방부 군수본부장

세계 방산시장에서는 고도의 과학기술전에 맞는 첨단 정밀과학기술 무기의 수요가 늘고, 방어전력 유지에 필요한 자원 절약형 기술 중심의 무기가 요구될 것입니다. 아울러 군비통제의 확산으로 기존 방산시장의 축소는 물론 방산시장의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은 더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근** 세계정세는 동서독의 통일, 미소 전략무기 감축조약 체결, 소련의 쿠데타 실패, 남북한 UN 동시가입과 미국의 전술핵 감축선언 등을 통한 냉전의 종식으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 세계정세

이에 따라 실리(實利) 및 경제 중심의 다극체제가 전개됨에 따라 군사안보에서 경제안보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양극체제의 와해로 인한 전쟁과 갈등 요인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는데, 이는 강대국의 영향력 약화로 민족, 종교, 영토, 자원 등 국가별 이해 상충지역의 국지분쟁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말하며 걸프전, 유고사태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 ● 세계질서의 특징과 전망

미·소 양극체제로부터 미국 중심의 불완전한 단극체제가 '90년대 중반까지 유지될 것이며, 자위방위력의 중요성은 증대하나, 군사력 사용의 유용성은 오히려 감소되고, 힘의 분산에 따른 소규모 국지분쟁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 세계 防産시장의 전망

따라서 세계 방산시장에서는 고도의 과학기술전에 맞는 첨단 정밀과학기술 무기의 수요가 늘고, 방어전력 유지에 필요한 자원절약형 기술 중심의 무기가 요구될 것입니다.

아울러 군비통제(축소) 분위기의 확산으로 기존 방산시장은 축소될 것이며, 방위산업 위축으로 인한 방산시장 확보경쟁은 더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 한반도 안보정세

#### ● 한반도 주변정세

우선 미국의 전략을 보면, 주한미군의 규모를 점차적으로 감축하여 주한미군의 역할을 보조적 지원 역할로 전환할 것입니다.

한편 소련은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유럽에 배치했던 우수 장비를 극동으로 이전하여, 극동군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軍 현대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도 세계 제3위의 방위비 사용을 기반으로 정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전략 및 위협

북한은 세계 여론에 밀려 유화정책을 표방하겠지만, 여전히 대남 무력적화전략의 자세를 고수할 것입니다. 아울러 단기 속전속결의 군사전략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 안보전략 및 대책

한반도의 정세는 '90년대 중반까지는 남북 대결의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한국군은 유사시에 대비 총합안보태세 구축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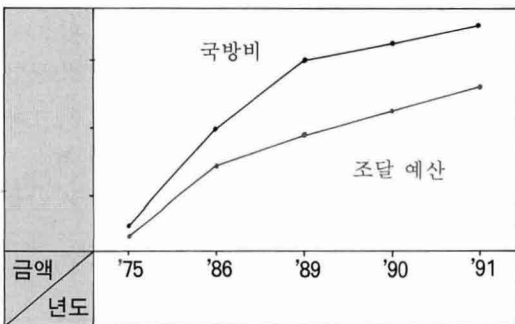
한국 국방조달시장 규모

●한국의 국방비 및 조달예산

'91년 한국의 국방비는 국가예산대비 27%, GNP대비 4% 수준이며, 조달예산은 국방비 대비 63% 수준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91년 국방비는 '90년 대비 약 12% 증가된 수준이며, '90년대 중반까지는 비슷한 비율로 국방비 및 조달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비 및 조달 예산 추세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국방비 및 조달예산 추세



현재 외자조달 규모는 17억5천만불에 이르며, 외자조달원은 미주지역(미국, 캐나다)에 편중되고 있는데, '88년~'90년 기간중 70%를 미주지역이 차지하고 있으며, 27%를 구주지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구매여건, 기술이전, 절충교역 등에 따라 조달원의 다변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 자 조 달

내자조달 실적은 '90년도 총3조9백19억원이며, 81%는 고도정밀 장비류로서 이의 상당부분은 부품을 해외구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생산 방산장비 부품의 해외구매 의존율은 뒷쪽의 <표>와 같으며, 탄약분야는 거의 국산화가 달성되었습니다.

●방산업체 현안문제점

해소방안 검토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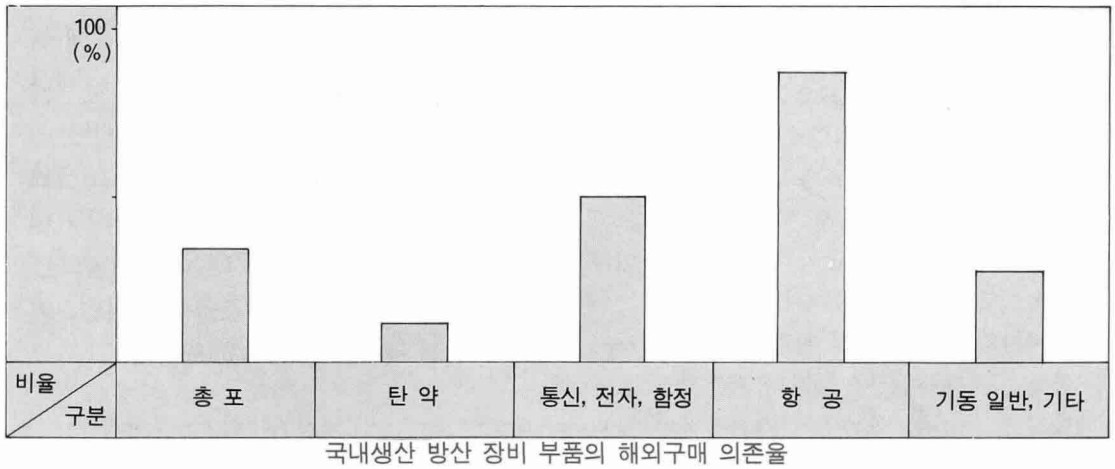
첫째, 방산물자의 착수금 지급방법은 현재 시행중인 착수금의 1,2차 구분 지급하는 현재도가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자금사정이 호전되었다고 판단시 일률적으로 70% 지급이 가능하도록 내규에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할 것입니다.

둘째, 방산업체의 노사분규시 지체상금의 면제 검토입니다. 자체 노사분규로 인한 지체상금면제 법규의 개정 검토를 국방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셋째, 확정계약의 사후관리 폐지입니다. 사후원가 확인 기준을 정립하여 최소화 운용하는 방안과 개산 계약제도 및 유인부 확정계약제도 활용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넷째, 원가삭감 지양입니다. 조달지시예산의 적정편성을 국방부에 건의토록 하며, 원가 계산 신뢰성의 제고 및 업체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 외 자 조 달

#### ●외자조달 대상 및 계약방법

외자조달 대상은 국산대체 심의결과 불가 품목이며 무기체계류는 무기체계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품목입니다.

외자조달 계약방법은 일반 공개경쟁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단 국방부 장관 승인시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외자조달의 규모와 전망

외자조달 규모는 '85년~'90년 기간중 2배가 증가되어 17억5천만불(약 1조2천억원)에 이르며, 상업구매 비중이 FMS 구매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자조달원은 미주지역(미국, 캐나다)에 편중되고 있는데, '88년~'90년 상업구매의 70%를 미주지역이 차지하고 있으며, 27%를 구주지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구매여건, 기술이전, 절충교역 등에 따라 조달원의 다변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절 충 교 역

#### ●절충교역의 기본방침

절충교역은 외자규모 2백만불 이상의 군용물자 획득시 적용되며, 선진기술 전수와, 부품 국산화 및 후속 군수지원능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절충교역 협상 완료 이전에는 기종결정 심의회에 상정이 불가함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절충교역 이행조건

절충교역의 이행기간은 주계약기간 이내로 하며,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은 직구매시는 주계약 이행보증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도입생산시는 별도로 10%를 설정하고 있으며, 단 사전 절충교역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외 업체는 3개월마다 이행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목표액 초과이행분은 차기사업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합니다.

절충교역 미이행시에는 미이행분의 10%를 이행금에서 몰수하고, 차기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 ●절충교역의 추진실적

'83년~'90년 기간중 국가별 절충교역의 실적을 살펴보면, 총 21억불 중에 미국이 15억불(약 1조억원)로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이 3억2천만불(15%), 이탈리아 1억3천만불(6%), 기타 1억5천만불(7%)순으로 미국으로부터의 기술전수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절충교역 초기에는 상품판매로 그 기반을 형성하였으나, '87년 이후에는 기술전수 위주의 절충교역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절충교역의 발전 전망

**'87년 이후 '90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對美 수입이 증가되고 對美 수출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미국업체의 역할로는, 장비 및 부품의 공동생산을 위한 협력 강화, 한국 군수물자의 수입증대, 군사교역 역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 등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사업별 대상금액을 현재 2백만불에서 5백만불(약 35억원)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며, 절충교역 비중도 현행 직접 20%, 간접 10%에서 30% 이상의 직접 위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도입생산시 2백만불 이상의 사업 중 가격기준으로 국산화율 50%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절충교역을 면제토록 할 계획입니다.

### 군사교역과 미국업체의 역할

#### ●대미 군수물자 수입과 수출

對美 군수물자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87년에는 9억1천만불이던 것이 '90년에는 16억5백만불(약 1조1천억원)로 76% 증가되었으며, '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對美 수출은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고 '87년도에 8천만불이던 것이 '90년도에는 1천만불로 현저히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91년도에는 8월말 현재 '90년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 ●미국업체의 역할

이러한 상황에서 요망되는 미국업체의 역할로는 다음을 들수 있습니다.

첫째 장비 및 부품의 공동생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 군수물자의 수입증대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군사교역의 역조 개선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 ●원활한 협상을 위한 요망사항

첫째, 정확한 판매실적 자료의 제공입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목표價를 산정하여 협상기간을 단축하고 협상의 결렬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동일장비의 차후 계약시 지나친 가격인상의 억제가 필요합니다. 즉 OECD, 美 노무성 물가자료 등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물가인상율만을 적용할 것을 기대합니다.

셋째, 계약체결시에 군수본부의 계약조건 수락으로 협상기간의 지연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군수본부의 조건은 국제무역의 商관례, ICC Rule, INCOTERMS, 국제법, 국내법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첨단장비에 대한 수출허가 조건의 완화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적외선 탐지 방해장비(AN/ALQ-156)의 경우, '87년, '88년 수출허가 조건부 계약을 맺었으나 현재 수출허가 불가통보 및 계약취소 요청을 접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레이더 전시기(AN/SPA-25G)의 경우 구형인 AN/SPA-25F는 수출허가로 상업구매가 가능하였으나, 개량형인 AN/SPA-25G는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 불허로 구매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섯째, 절충교역에의 적극적인 참여 및 기술이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직접교역과 기술의 무료제공 등은 무기 구매선 선정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업체능력을 실사(實査)한 후, 국내업체 추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기술지원으로 목표달성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가격협상시의 참고사항으로서 협상은 국방부 승인시에 유효함을 전제로 한 假계약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가격 결정은 「경쟁입찰제도」가 아닌 「가격협상제도」를 적용하는바, 가격만으로 무기체계 구매가 결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